



주간통일정세 2008-46(2008.11.10~11.1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8-46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조선중앙TV, 김정일 공연관람 모습 공개 안해(11/16,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TV는 16일 오후 5시 뉴스 시간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32차 군무자예술축전 공연을 관람한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 모습은 단 한 장도 내보내지 않은 채 북한군 중대군인들의 공연사진 12장만을 공개
-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새벽 일시나 장소를 밝히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이 김격식 군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비롯한 고위 군 간부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 당 간부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32차 군무자예술축전에 참가한 해군 제155군부대 관하 함(艦)과 제833군부대 관하 중대, 제1313군부대 관하 중대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
- 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공연은 20여 명이 나란히 앉으면 딱 찰 정도로 폭이 매우 좁은 소극장에서 진행됐으며 공연장에는 계단식 무대가 설치돼 있고, 무대 뒤편에는 군부대 마크로 보이는 4각형 깃발 12개를 만국기처럼 줄에 매달아 놓은 장식품이 걸려 있었음.
- 중앙TV는 북한해군 군인 87명이 계단에 앉은 채로 아코디언 반주에 맞춰 울동을 하며 합창하는 장면, 80여 명의 여군들이 일부가 분홍빛 조화를 흔드는 가운데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하는 장면, 남자 군인 4명의 합창 장면,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남자 군인 3명이 소총을 메고 공연하는 장면 등이 담긴 사진을 내보냄.
- 그러나 12장의 사진은 북한 군인들의 공연 모습만을 조금 멀게 또는 가깝게 찍은 것들이며, 무대 이외의 관람석 모습이나 김 위원장이 관람하는 모습 등은 찾아볼 수 없어 이들 사진이 실제로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 때 촬영된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음.
- 한편,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공훈국가합창단과 만수대예술단 등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던 11월 6일에는 관련 사진을 단 한 장도 공개하지 않음.

##### ● 김정일 전용 열차 움직임 없어(11/15, 도쿄신문)

-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 8월 중순 이후 그가 이용하는 특별 열차가 평양에 있는 전용 역에서 정차한 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쿄(東京)신문이 15일 보도



- **김정일, 10월말 두번째 뇌졸중 발생(11/11, 일본 민방 TBS)**
  -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0월 하순에 두번째로 뇌졸중을 일으켰다는 정보를 미국 당국이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본 민방 TBS가 11일 보도, 방송은 한국에 있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가 이런 정보를 확인해 줬다고 밝힌.

#### 나. 정치 관련

- **北, 10·4선언 이행이 금강산관광 재개 길(11/15, 통일신보; 11/16, 우리민족끼리)**
  - 통일신보는 이명박 정부가 “하루빨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며 “여기에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북남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있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신문은 금강산관광 개시 10주년(11.18)을 앞두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외세와 공조를 추구”하는 한 “금강산관광이 순조롭게 될 수 없고 북남관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
  - 신문은 남한 정부가 “올해 7월 뜻하지 않게 발생한 남조선 관광객 사망 사건을 반공화국 정치적 도발의 구실로 삼아 북남관계를 더욱 험악한 대결로 몰아가고, 나중에는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 공세
  - 신문은 아울러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사실 공화국(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금강산 지역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며 당시 “정주영 선생의 소중한 마음을 귀중히 여기고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금강산이야말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무지개 다리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생동한 현상이었다”고 강조
- **北, ‘통미봉남론’ 일축(11/15, 통일신보; 11/16, 우리민족끼리)**
  - 통일신보는 ‘공화국의 입장은 일관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남관계를 단절로 몰아간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미국 대선 후 제기되고 있는 통미봉남론이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라고 일축하고 “조(북)미 사이 관계개선 문제는 공화국과 미국 사이에 해결할 문제로 남조선(남한) 당국이 여기에 간섭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주장
- **北, 남북대화 분위기 마련돼야(11/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북침전쟁연습은 평화위협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15일 이명박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촉구에 대해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장난에





대부분의 아파트는 칠흙같은 어둠속에 쌓여있어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었음.

- 통신은 이어 정전이 한국 방문객들이 북한 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하는 도중에도 발생했는데, 실제 정전인지 아니면 연출 상황인지 몰라 박수를 쳐야 할 지 어색한 상황도 발생했다고 전언

● 北, 먹는 문제 해결은 중대 정치사업(11/1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4일 식량문제는 북한의 현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본 고리”인 만큼 이 먹는 문제를 푸는 것이야말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독려

● UNDP, 北과 사업재개 방안 논의(11/14,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개발계획(UNDP)이 대북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북한측과 본격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 1월 UNDP 이사회의 승인이 날 경우 상반기중 평양사무소가 다시 설치돼 대북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관계자들의 보도, UNDP 실무진이 일주일간 평양을 방문해 대북사업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북측과 협의하고 지난 주말 미국으로 귀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현재 북한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포괄적 방안’(a package of measure)이 마련되고 있다”고 언급

● 대북진출 오라스콤, 노키아와 협력 계약(11/14, 자유아시아방송)

- 대북 사업을 벌이는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 텔레콤이 10월 27일 세계적인 통신회사인 핀란드의 노키아와 협력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오라스콤 텔레콤이 준비하고 있는 북한의 휴대전화 사업에 노키아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노키아는 앞으로 오라스콤에 음악과 동영상, 네비게이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오라스콤측은 “노키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오라스콤사가 진출한 나라의 모든 오라스콤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北 올해 김장배추 작황 좋은 듯(11/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북한에서 연례적인 장마나 가뭄으로 늘 부족하던 김장배추가 올해는 비교적 풍작이라고 전망, 조선신보는 11일 김장배추를 실은 수송차량이 평양시내를 달리는 장면을 묘사한 기사에서 “보기에도 한아름은 될 것 같은 통진(속이 팍 찬) 배추와 실한 무들은 올해의 남새(채소)농사 작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언





● **엔벤 대북무역 83% 증가(11/11, 연변일보)**

- 중국 엔벤(延邊)조선족자치주의 대북무역이 올해 들어 9월까지 크게 증가, 동포신문인 연변일보는 11일 “금융위기로 인한 대외무역수출이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엔벤조선족자치주)의 대 조선(북한)무역이 궤속 성장했다고 주정부가 밝혔다”고 보도
- 신문은 “통계에 따르면 9월까지 우리 주의 대 조선 수출입무역액이 3억3천432만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동시기에 비해 82.72% 증가한 것”이라며 “그중 수출액이 1억5천971만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동시기에 비해 47.1% 증가한 것”이라고 보도

라. 사회·문화 관련

● **17세 이하 여자축구월드컵 우승 보도(1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여자축구팀이 16일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축구월드컵 결승전에서 미국팀을 2대 1로 꺾고 우승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외국서 교정기구 생산라인 도입(11/15, 조선신보)**

- 북한의 장애인 교정기구를 생산하는 함경남도 함흥시 함흥영예군인(상이군인)교정기구공장 근로자들이 외국에서 수입한 생산라인 운영을 위해 해외에서 기술교육을 받았다고 조선신보가 15일 보도
- 신문은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가 2006년 유럽연합(EU) 보건기구의 협력을 받아 폴리프로필렌 교정기구 생산라인을 수입해 설치했다며 EU 보건기구 관계자들이 직접 함흥 공장을 방문해 기술도 전수했다고 보도

● **北여자축구, 리금숙 은퇴할 듯(11/14, 조선신보)**

- ‘아시아 최강’인 북한 여자축구팀의 간판 골잡이 리금숙(30)이 최근 결혼함에 따라 현역선수 생활을 그만 둘 가능성이 크다고 조선신보가 14일 보도, 신문은 “베이징올림픽 준결승팀인 브라질과 예선경기에서 득점한 것이 국가종합팀 경기조직자, 공격수로서 그(리금숙)가 차 넣은 마지막 골이 될 것 같다”고 그의 대표팀 은퇴를 기정사실화함.

● **평양 면모일신, 유경호텔 3년내 완공 예정(11/12, 연합)**

- 북한이 수도 평양에 아파트를 짓는 타워크레인이 새 마천루를 형성하고 있고 16년간 폐허처럼 방치됐던 류경호텔 건설 공사가 재개됐으며 각종 건설 현장에 쓰일 석재 채취를 위해 거대한 준설 장비와 바지선이 강을 메우고 있음.
- 평양 소식통들은 북한 당국이 건국 60주년인 올해 이처럼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는 것은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12년



- 까지 평양을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봄.
- 류경호텔 공사는 아랍에미리트(UAE) 회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北, 첫 장애인 ‘예체능 훈련장’ 건립(11/10, 조선신보)**

- 북한이 처음으로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예체능 훈련장 성격의 ‘청소년 예술 및 체육양성센터’ 건설을 추진, 연내 문을 열 예정이라고 조선신보가 10일 보도
-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가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짓고 있는 이 센터의 건립은 “예술과 체육에 소질과 취미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주어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당당히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신문은 소개

## 2. 대외정세

### 가. 6자 회담관련

● **정부, 6자차원 대북지원 집행(11/16, 연합)**

- 정부가 핵 검증에 대한 북한과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주기로 돼 있는 경제·에너지 지원은 조만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짐. 외교 소식통은 16일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은 핵시설 불능화와 연계된 것”이라며 “관련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생산이 완료된 강관 3천t은 곧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
-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한·미·중·러 등 4개국은 북핵 비핵화 2단계인 신고·불능화의 대가로 북한에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을 제공키로 하면서 이 중 45만t은 중유, 나머지 50만t은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로 지원하기로 했었음.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중유 5만t과 중유 약 6만6천t에 상당하는 에너지관련 장비와 자재를 제공했으며 북에 주기로 합의한 물량 중 미제공분인 자동용접강관 3천t의 생산도 10월 말 생산이 끝나 언제든 지원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등 다른 참가국들도 약속된 중유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 **조선신보, 시료채취는 불능화단계 후 논의 가능(11/1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5일 북한이 핵검증의 최대 관건인 시료채취에 대해 핵시설 불능화 단계가 아닌 핵무기 폐기 단계에서나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 신문은 “플루토늄에 대한 시료채취로 조선(북)이 추진한 핵계획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단서를 확보하는 시점이라면 마땅히 미국을 포함한 5자도 그에 상응한 행동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아직은 비핵화 노정이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지적



- 신문은 특히 “무력화(불능화) 단계는 핵시설 폐기 과정의 도입부에 지나지 않으며 핵무기 문제의 논의는 조선이 현존 핵계획을 포기한 다음의 의제”라고 주장, 시료채취가 핵무기 폐기 단계에서나 이뤄질 수 있는 사안임을 시사
- 신문은 북·미 합의에 시료채취가 포함됐는지 논란에 대해 “핵시설의 무력화 단계에서 핵신고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검증에는 그것(시료채취)이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금후의 비핵화 노정을 내다보며 조·미가 검증문제를 논할 수 있고, 그 어떤 사항을 구두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언급
- 신문은 검증과 관련해 북·미가 “문구로 합의한 내용”은 ‘10·3합의 완결 이후 영변 핵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 인터뷰’로 “한정적인 것”이었다고 지난 12일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내용을 재확인한 뒤 “10·3합의 이행 완결을 위해 6자 단장회담이 열릴 경우 각 측이 토의할 사안을 규제하는 것은 조미가 서명으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

#### ● 美, 시료채취는 근본적 합의사항(11/12, 연합)

- 미국은 12일 북한이 핵신고 검증의 핵심인 시료채취(샘플링)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전문가들이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북한 밖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북미간에) 합의된 것”이라고 밝힘.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료 채취를 포함한 과학적 절차를 따라 핵시설을 검증한다는 10월 11일 북미간 합의내용을 되풀이하며 이같이 언급
-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의 시료채취 거부 입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샘플링을) 허용 하느냐 아니냐에 관해선 말하지 않겠다”며 직접적 언급을 피함. 그는 “지금 이 같은 일부 언론 보도들에 대해 대답하고 있다”며 “나는 단지 샘플링 이슈와 관련해 사정이 어떤 것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해두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 앞서 북한 외무성은 이날 북핵 검증에 관한 북미간 합의 내용과 관련, “검증 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된다고 밝혀 시료채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음.

#### ● 美, 北에 중유 5만t 제공(11/12, 연합)

- 북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12일 북한에 제공할 중유 5만t을 선적하고 있다면서 중유가 11월 말이나 12월 초 북한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국무부 로버트 우드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미국 정부는 행동 대(對) 행동 원칙에 따라 미국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 **北외무성, 북핵 시료채취 거부(11/12, 북한 외무성)**

- 북한 외무성은 12일 북핵 검증에 관한 북미간 합의 내용과 관련, “검증 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된다고 밝혀 시료채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함.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6자회담 10·3합의 이행이 지체되는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그릇된 여론을 내돌리는 세력”이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 등을 더 포함시킨 검증문건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
- 담화는 10월 초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때 핵신고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10·3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전제로 취하게 될 검증조치들이 “문구로 합의됐다”며 서면합의된 검증방법에 시료채취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 담화는 “검증 대상은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궁극적으로 폐기하게 될 영변 핵시설로” 하고, “검증시기는 10·3합의에 따른 경제보상이 완전무결하게 결속된 이후로 한다는 것”이 당시 서면합의의 골자라고 언급
- 담화는 북미간 검증합의 때 특히 북한의 “특수상황”에 대해 “견해의 일치를 봤다”고 주장하며, 그 특수상황은 북한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하고 NPT 밖에서 핵시험을 진행하여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포한 나라이며 6자회담은 현재 9·19 공동성명 이행의 두번째 단계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

나. 북·미 관계

● **재미교포 北이산가족 상봉자 84명(11/15, 자유아시아방송)**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84명의 재미교포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북한의 가족을 만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15일 보도
- 국무부는 11월 10일 상하원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미국 시민과 북한 가족 간 상봉에 관한 보고서’에서 “한국계 미국 시민 84명이 남북한 정부가 주관한 16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다른 한국 국적 친지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북한의 가족들을 만났다”고 밝힘. 국무부는 특히 현재 북·미 간 외교관계가 수립돼 있지 않지만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면 정부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이 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사관, 영사관, 연락사무소 등 외교공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적당한 시기에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
- 이어 미국 외교공관이 평양에 설치될 경우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와 북한 가족 간 상봉을 주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국무부는 또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일환으로 완전한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 간 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현재의 법적, 외교적 환경 속에서는 미국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도



- **美 의회조사국, 北테러지원국 해제 비판(11/13, 요미우리신문)**
  -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것과 관련, 미국 의회 조사국이 “김정일 정권이 중동 테러그룹이나 테러지원 국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거나 확대하도록 장려하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미의회에 배포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보도
  - 보고서는 또 “미국이 향후 중동에서의 북한의 활동에 대처하려 해도 더이상 협상의 지렛대가 없어졌다”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따라 북한의 중동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억제력이 없다고 지적
- **2009년 美유명미술관서 北미술 전시회 개최(11/1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현대 미술작품 전시회가 2009년 하반기 미국의 뉴욕 또는 워싱턴에서 유명 미술관 주관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1일 보도
  - 그동안 미국에서 북한 미술품 전시회는 재미 한인들에 의해 소규모로 열린 적은 있지만, 미국의 유명 미술관이 주최하는 대규모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RFA는 설명

#### 다. 북·중 관계

- **북, 중국인 육로관광 차단(11/13, 연합뉴스)**
  - 북한이 10월 중순부터 중국인들의 육로 관광을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 북한 국적의 화교인 조교(朝僑)나 중국 체류 북한인들의 열차를 이용한 월경(越境)도 신분 확인 검사가 까다로워졌다고 신의주와 인접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소식통들이 13일 보도
  - 단둥 K여행사 관계자는 이날 “10월 중순 이후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베이징(北京)과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항공편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 북한 나진·선봉과 인접한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에서도 11월 부터 북한으로의 기차 여행이 중단됐으며 훈춘의 여행 중단은 북한이 매년 할당하는 관광객 쿼터(quota)가 소진된 것이 원인이라고, 그러나 단둥 여행업계 관계자는 “단둥은 아직 쿼터가 남아 있는데도 북한이 항공편만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언급
  - 북한을 드나드는 단둥의 무역업자들도 북한 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북한으로 싣고 간 물자를 북한 내에서 이동시키는 데 애를 먹고 있음.
- **中, 北 혼란 대비해 국경에 병력 증강(11/13, 파이낸셜타임즈)**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가면서 중국은 지난 9월 이후 북한과 접경지역에 군병력을 증강하는 한편 울타리 설치도 늘리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



● **北리근, 中에 北美회동 결과 설명(11/12, 연합)**

- 북한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북·미간 회동 결과를 중국측에 설명하고 북핵 6자회담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12일 알려짐. 뉴욕 방문을 마친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은 11일 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뒤 12일 중국 외교부를 방문, 중국 측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전언
- 리 국장은 11일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미 기간에 좋은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미국 방문이 성공적이었느냐는 질문에 “잘 진행됐다”고 답변, 리 국장은 고려항공 정기운항일인 13일 오후께 북한으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

라. 북·일 관계

● **北, 日에 추가 납치피해자 존재 시사(11/13, 교도통신)**

- 북한이 지난 6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실시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일본측에 대해 추가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3일 보도
- 통신에 따르면 일본과의 물밑 협상 과정에서 북한측은 양측간 협상 진전을 조건으로 일본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는 17명 이외의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정보 및 17명의 안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민주조선, 日 6자회담 참가명분 희미(11/11, 민주조선)**

- 북핵 6자회담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조선은 ‘논리적 사고 능력이 마비된 자들의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11일 북한으로서는 “회담의 진전에 장애로 되는 일본을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거듭 주장

마. 기타외교 관계

● **北, 이란주재 대사에 서세평 임명(11/16,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이 김창룡 이란주재 대사의 후임으로 서세평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16일 보도, 서 신임대사는 카라치 주재 북한총영사관 영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약력은 확인되지 않음.
- \* 북한과 이란은 1973년 4월 수교

● **北공군사령관, 쿠바 방문(11/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쿠바를 방문하는 공군사령관 리병철 상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공군대표 단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은 리 사령관의 쿠바 방문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올해 초 공군사령관에 오른 리 상장은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북한의 공군이 최근 해외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어 주목
- \* 북한과 쿠바는 지난 9월 경제교류와 관련한 두 건의 의정서를 체결했으며 10월에는 북한이 잇단 허리케인 피해를 본 쿠바에 물자를 지원하기도 하는 등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UN, 北 인권결의안 상정...20일전후 처리(11/14, 연합)

-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상정돼 20일(현지시간)을 전후해 처리될 것으로 보임. 유럽연합(EU) 등이 주도한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우리나라도 이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상태, 이번 결의안의 표결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북한측은 이번 인권결의안 상정과 관련해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반발
- \* 대북인권결의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며 총회가 북한 인권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짐.

3. 대남정세

● 강기갑, 北사민당 김영대 위원장 면담(11/16, 조선중앙통신)

- 방북 중인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1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사민당) 중앙위원장과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그러나 강 대표와 김 위원장 간의 대화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강 대표와 광정숙 의원, 이영순 자주평화통일위원장, 박승흡 대변인 등 당원 20명으로 구성된 민노당 대표단은 북한 사민당과 정당 교류 차원에서 15일 4박 5일 일정으로 방북

● 정부, 민간단체 남북협력기금 지원 재개(11/14, 연합)

- 정부는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중단했던 민간 대북 지원 단체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짐. 정부 당국자는 이날 “민간 단체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추진하는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에 10억원 정도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키로 하고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언급

● 통일부, 北, 통신자재 받을 것(11/14, 연합)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정부의 자재제공 제의에 응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통신 자재는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



요구해온 사안이고 북에서도 개성공단의 확대발전을 바라고 있다”고 언급, 그러나 전날 통신 자재·장비 제공 협의를 위해 북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 대해 아직 북측으로부터 반응은 없다고 답변

● **北군부, 이젠 남한 가서 사업하시라(11/13, 연합)**

- 지난 6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실태 조사를 벌인 북한 국방위원회 김영철 중장 등 군 장성들이 공단에 입주한 남측 기업 관계지들을 만나 “이제 (남한에) 내려가서 (사업을) 하시라” “(공장을) 옮기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13일 전해짐.
- 개성공단에 공장을 갖고 있는 한 남측 업체 대표는 “김 중장 등 북한 군 장성들이 6일 우리 공장에서 45분간 머물며 회사 직원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으며 이 기업인은 “북한 장성들은 또 ‘여기(개성공단)는 군부 땅이다’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임.

● **北적십자, 판문점 경유 남북 직통전화 단절(11/12,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12일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북한 측 대표를 철수시키며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남북 직통전화 통로를 단절한다고 밝힘. 북한 적십자회 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대해 “우리(북)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같이 언급
- 성명은 북한이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경고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경고와 내외여론을 무시하고 끝까지 동족대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부득불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북한 적십자회는 “남조선 보수당국에 의해 조성된 엄중한 사태로 하여 더는 자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우리 측 대표들을 철수시키며,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북남 직통전화통로를 단절한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주장
- 성명은 특히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간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마저 완전히 차단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에 있다고 책임을 돌리면서 “앞으로 북남관계의 운명은 남조선 보수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

● **北군부, 분계선 통과 제한 발표(1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이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지난 9개월간 경색국면을 이어온





- 남북관계가 중대국면을 맞게 됨.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의 김영철 단장은 12일 남측 군당국에 보낸 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제적인 중대조치가 단행된다 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지문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부를 비롯한 남조선 괴뢰 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남한 정부에 대해 “현 북남관계가 전면차단이라는 중대기로에 놓여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조선신보 “시료채취는 불능화단계 후 논의 가능”(11/15)

-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5일 북한이 핵검증의 최대 관건인 시료채취에 대해 핵시설 불능화 단계가 아닌 핵무기 폐기 단계에서나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음.
- 조선신보는 “플루토늄에 대한 시료채취로 조선(북)이 추진한 핵계획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단서를 확보하는 시점이라면 마땅히 미국을 포함한 5자도 그에 상응한 행동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아직은 비핵화 노정이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신문은 특히 “무력화(불능화) 단계는 핵시설 폐기 과정의 도입부에 지나지 않으며 핵무기 문제의 논의는 조선이 현존 핵계획을 포기한 다음의 의제”라고 주장, 시료채취가 핵무기 폐기 단계에서나 이뤄질 수 있는 사안임을 시사했음.
- 신문은 북·미 합의에 시료채취가 포함됐는지 논란에 대해 “핵시설의 무력화 단계에서 핵신고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검증에는 그것(시료채취)이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금후의 비핵화 노정을 내다보며 조·미가 검증문제를 논할 수 있고, 그 어떤 사항을 구두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
- 신문은 검증과 관련해 북·미가 “문구로 합의한 내용”은 ‘10.3합의 완결 이후 영변 핵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 인터뷰’로 “한정적인 것”이었다고 지난 12일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내용을 재확인한 뒤 “10.3합의 이행 완결을 위해 6자 단장회담이 열릴



경우 각 측이 토의할 사안을 규제하는 것은 조미가 서명으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9.19공동성명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담보협정 이행이 언급돼 있지만 아직 성명 이행의 2단계도 마무리하지 못했고, 10월 초 조미 쌍방이 이룩한 검증문제 합의는 이러한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를 골자로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르는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조선의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를 노리는 수작”이라고 비난했음.

- 신문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10.3합의에 따르는 경제보상 의무를 태공하면서 검증문제를 걸어 합의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책임을 조선측에 들씌우려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북핵 6자회담 틀에서 북에 주기로 한 철강재 3천t 제공을 핵검증 의정서가 채택될 때까지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 진전없이 에너지 지원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데 대해 비난했음.

#### ● 美 “시료채취는 근본적 합의사항”(11/13)

- 미국은 12일 북한이 핵신고 검증의 핵심인 시료채취(샘플링)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전문가들이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북한 밖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북미간에)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음.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료 채취를 포함한 과학적 절차를 따라 핵시설을 검증한다는 지난달 11일 북미간 합의내용을 되풀이하며 이같이 말했음.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의 시료채취 거부 입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샘플링을) 허용 하느냐 아니냐에 관해선 말하지 않겠다”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음. 그는 “지금 이 같은 일부 언론 보도들에 대해 대답하고 있다”며 “나는 단지 샘플링 이슈와 관련해 사정이 어떤 것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해두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 北외무성, 북핵 시료채취 거부(11/12)

- 북한 외무성은 12일 북핵 검증에 관한 북미간 합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검증 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된다고 밝혀 시료채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음.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6자회담 10.3합의 이행이 지체되는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그릇된 여론을 내돌리는 세력”이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 등을 더 포함시킨 검증문건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담화는 10.3합의 내용에 대해 검증 대상은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궁극적으로 폐기하게 될 영변 핵시설”로 명시됐고, 검증 시기는 “10.3합의에 따른 경제보상이 완전무결하게 결속된 이후로 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주장했다.
- 담화는 특히 지난달 초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때 검증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특수상황”에 대해 “견해의 일치를 봤다”고 주장하며, 그 특수상황은 북한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하고 NPT 밖에서 핵시험을 진행하여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포한 나라이며 6자회담은 현재 9.19 공동성명 이행의 두번째 단계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화는 이러한 특수상황이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방법과 범위를 규제한다고 덧붙였다.

- 이어 답화는 6자회담 참여국 5자의 경제보상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폐연료봉을 꺼내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며 “경제보상이 계속 늦어지는 경우 무력화 속도는 그만큼 더 늦춰지게 될 것이며 6자회담 전망도 예측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오바마 공식 홈페이지 정책우선과제서 북핵문제 누락(11/12)

-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 20일 출범할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우선 추진 정책 과제를 소개하면서 북한 핵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지난 7일 개설된 오바마 당선인 공식 홈페이지(www.change.gov)는 당선인과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이 “현재 미국이 처한 도전에 대처하고 필요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혁신적 접근법을 개발해왔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정책들을 수행할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어젠다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 홈페이지는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한 정책우선과제로 ▲경제살리기 ▲의료보험·교육·사회보장시스템 개혁 ▲명확한 에너지 자급 방안 정립 ▲이라크 전쟁의 책임있는 종식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임무 완수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 등 예시.

#### ● 北신문 “日, 6자회담 참가명분 희미”(11/11)

- 북핵 6자회담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1일 북한으로서는 “회담의 진전에 장애로 되는 일본을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신문은 ‘논리적 사고능력이 마비된 자들의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납치문제를 걸고 대북 에너르기(에너지) 지원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 일본의 6자회담 참가 명분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논문과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막료장에 대해 “정신이 나간 자의 낫두리”라고 비난하며 “일본 사회가 군국주의 독소에 깊숙이 중독돼 있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북미회담, 6자회담 목표달성 도움”(11/11)**

-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조선일보-일본 마이니치-영국 더 타임스 공동 인터뷰에서 “북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은 그것(북미 정상회담)이 한국을 소외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기지만 나는 한 점도 염려하지 않는다”면서 “오바마 당선인은 남북문제에 관한 한 한국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며, 오히려 부시 정권 때보다 양국이 서로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은 다만 “오바마 정권은 인권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문제도 대두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것에 대해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더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이 공동번영하며, 실질적이고 정직한 대화를 위해서는 김 위원장을 수시로 만날 수 있다”면서 “물론 장소는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 **프리처드 “북핵, 오바마 정부 우선순위에 밀려”(11/11)**

- 미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초기에 미 국무부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0일 차기 오바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우선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내다봤음.
- 프리처드 소장은 이날 워싱턴 D.C.의 KEI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중요한 보직이 채워지려면 전례에 비추어 대통령 취임 후 3~4개월이 소요된다”며 “북핵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은 당장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 초기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면서 “오히려 성 김 국무부 대북특사와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을 유임시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 그는 “차기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 잃어버린 고리를 찾으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제2차 핵위기 발생 경위 및 북-시리아 핵확산 커넥션을 엄중히 들여다 볼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 **“오바마, 북핵 협상 서둘러 안돼” <뉴스위크> (11/10)**

-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9일 오바마 당선인이 외교 정책에서 급히 서둘러 중요한 판단을 내릴 경우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핵 문제 등에서 보다 신중하고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





- 부시 현 행정부가 빌 클린턴 전임자의 대북 정책을 급선회했던 사례 등은 외교 정책의 실수로 꼽히고 있음.

## 나. 미·북 관계

### ● “北, 검증협상보다 에너지 지원에 관심” <美전문가>(11/15)

- 북한은 현재 핵검증 협상보다 비핵화 2단계(불능화 및 신고) 완료와 에너지 지원 전망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미국의 외교 전문가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RFA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의 리 근 미국국장은 지난 6일 뉴욕에서 미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성 김 북핵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핵검증 문제보다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당시 협상에 정통한 미국의 외교 전문가’가 전했다.
- 리 국장도 만났다는 이 전문가는 “현재 큰 관심사는 우선 북한이 신고한 시설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실시할지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비핵화 2단계 합의에 따라 에너지 지원을 계획대로 제공할 수 있을지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 국장이 방미 기간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미국 측이 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정확한 일정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검증 협상에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북한의 핵검증 시료채취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힐 차관보의 방북을 계기로 미·북 간 시료채취에 관해 구두양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우선 비핵화 2단계가 완료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검증 논의에 응할 것”이라며 실제 검증을 위해서는 구두합의에 대한 ‘문서화 협상’이 필수적이라고 이 전문가는 강조했다.
- 그는 “힐 차관보와 성 김 특사가 리 국장과 협상을 포함, 몇 번에 걸쳐 검증에 관한 구두합의를 문서화하려고 시도했지만 문서화 대가로 북한에 더 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면서 “결국 이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가 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 “재미교포 北이산가족 상봉자 84명” <미국무부 보고서>(11/15)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84명의 재미교포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북한의 가족을 만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15일 보도. 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0일 상하원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미국 시민과 북한 가족 간 상봉에 관한 보고서’에서 “한국계 미국 시민 84명이 남북한 정부가 주관한 16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다른 한국 국적 친지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북한의 가족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 국무부는 특히 현재 북·미 간 외교관계가 수립돼 있지 않지만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면 정부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할 수 있을 것”이





라며 양국이 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사관, 영사관, 연락 사무소 등 외교공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적당한 시기에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했음. 이어 미국 외교공관이 평양에 설치될 경우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와 북한 가족 간 상봉을 주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무부는 또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일환으로 완전한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 간 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현재의 법적, 외교적 환경 속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 미국 정부가 재미교포의 이산가족 상봉 관련 의회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올해 발표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지원법’에 따라 작성됐음.
- RFA는 그러나 “한국계 시민권자들이 비공식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산가족을 상봉한 현황은 이번 보고서에 집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 체코 탈북자 美 추가 입국(11/15)

- 체코 프라하에서 현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 4명 가운데 1명이 오는 17일 미국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 RFA에 따르면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는 재미교포 윤희운 목사는 40대의 탈북 여성 1명이 체코에서 미국으로 온다는 연락이 미 난민정책 사무실로 왔다고 전했다.
- 이 여성은 중국 베이징의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서 보호받던 중 북송될 위험에 처해져 지난 7월 프라하에 도착한 탈북자 5명 가운데 한 명으로, 탈북 남성 1명은 8월 먼저 미국에 도착했음. 윤희운 목사는 이번에 미국에 도착할 탈북 여성은 시애틀에 정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 RFA는 “나머지 탈북 난민 3명의 (미국) 입국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미 국무부 발표를 인용,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후 지금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14일 기준으로 68명”이라고 덧붙였다.

#### ● UNDP, 北과 사업재개 방안 논의(11/14)

- 유엔개발계획(UNDP)이 대북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북한측과 본격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 1월 UNDP 이사회의 승인이 날 경우 상반기 중 평양사무소가 다시 설치돼 대북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
- UNDP 뉴욕본부의 크리스티나 로니그로 공보관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UNDP 실무진이 일주일간 평양을 방문해 대북사업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북측과 협의하고 지난 주말 미국으로 귀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현재 북한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포괄적



방안'(a package of measure)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 유엔 관계자들은 지난 9월 열린 UNDP 집행이사회의 비공식 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사국이 UNDP의 사업계획안을 지지했고, 대북 사업의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했던 미국과 일본도 반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1월 집행이사회에서 대북사업 재개가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음.
- UNDP는 지난 1981년부터 농경지 복구,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혁 지원 등 다양한 대북 지원사업을 벌여오다 작년 미국측의 자금전용 의혹 제기로 지난해 3월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5월에는 북한사무소도 폐쇄했음.

● “오바마정부, 北.美 무력충돌 대비해야” <정책제안서>(11/14)

- 내년 1월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북한.중국과의 무력충돌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 진보센터(CAP)가 최근 발간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주장. 또 오바마 정부는 정권인수기간 및 정권 출범 초기에 대대적인 테러공격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CAP는 밝혔다.
- 대선 기간 중 오바마 당선인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던 CAP는 최근 발간한 ‘미국을 위한 변화: 제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 청사진’이라는 657쪽 분량의 정책제안서에서 이같이 제안했음. CAP는 오바마 정권인수팀의 공동의장인 존 포데스타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소장을 맡고 있는 등 오바마의 핵심적인 싱크탱크라는 점에서 이번 제안서는 오바마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美 의회조사국, 北테러지원국 해제 비판” <요미우리>(11/13)

-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것과 관련, 미국 의회조사국이 “김정일 정권이 중동 테러그룹이나 테러지원 국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거나 확대하도록 장려하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미의회에 배포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지난 6일에 작성된 것으로 각종 보도에 입각해 미국이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한 이란의 핵탄두 개발에 북한이 기술 협력을 하고 있으며 국제테러조직으로 지정된 헤즈볼라 등에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보고서는 또 “미국이 향후 중동에서의 북한의 활동에 대처하려 해도 더이상 협상의 지렛대가 없어졌다”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따라 북한의 중동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억제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를 작성한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북한은 핵탄두 등의 개발을 이란에 위탁할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시설을 불



능화해도 빠져나갈 길이 생긴다”라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북한의 비핵화 전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음.

● “북·미 상호인정하는 수준까지 가야” <美군사학자>(11/13)

- 미국은 북한 정권을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특사파견과 상호 연락 사무소 개설 등을 통해 상호인정하는 수준까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 미국 국립전쟁대학의 마이클 마자르 교수는 12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한 강연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현상유지는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북한을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그 방법 보다는 일정한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음.
- 마자르 교수는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협상카드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체제유지 문제와 관련해 원하는게 있다면 미국이 그런 점에 신경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내년 2월 출범할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중전보다 격상된) 고위급 차원의 대북접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과연 북한 정권의 실체는 무엇이고, 북한 정권의 교체를 원하는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 스스로 답변할 준비가 돼 있는지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또한 그는 “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동맹은 물론 미국 내부조차 모르게 협상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6자회담 틀 밖에서도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음.

● “년-루거 프로그램 北적용 탄력받을 듯” <RFA>(11/13)

- 미국의 샘 년 전 상원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에서 국방 분야를 총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위협감축 협력 프로그램인 ‘년-루거 프로그램’을 적용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
- 년-루거 프로그램은 1991년 샘 년, 리처드 루거 의원이 주도한 입법에 따라 미국이 자금과 기술,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해 우크라이나 등에 있는 옛 소련의 핵무기를 해체한 것. 미 의회 고위 관계자는 “년-루거 프로그램에 대한 오바마 당선인의 이해가 깊은 점은 이 프로그램의 북한 적용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했음.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년-루거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핵실험 국가에 대한 예산지원을 금지한) 글렌 수정조항이 북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한 북한 핵의 폐기에 좋은 여건”이라고 말했음.



● “北 핵시료채취 거부 오바마와 협상하겠다는 것” <美전문가>(11/13)

- 북한이 최근 핵시료 채취를 거부한 것은 부시 행정부와 협상을 그만하고 미국의 차기 정권인 오바마 정부와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하겠다는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됐음.
- 게이 세이모어 미 외교협회(CFR) 부회장은 12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CFR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북핵 문제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시료 채취를 거부한 것은 부시와 협상을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고 오바마와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음.
-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유세과정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몇 개월 뒤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은 오바마 정권이 에너지 지원 문제 등에서 훨씬 관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
- 세이모어 부회장은 “북한의 목표는 협상을 할 수만 있으면 길게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좌절시켜 핵무기 포기 요구를 단념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대가를 얻어내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대북 협상은 더디고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세이모어 부회장은 “북한이 39-40kg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 검증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증 과정에서 북한의 관심은 대가를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변 핵시설을 포함해 나머지 핵시설에 대한 시료채취나 접근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또 “기술적으로 볼 때 플루토늄과 관련된 검증보다 핵농축과 핵기술 이전 문제가 훨씬 더 어렵고 차기정부에도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美, 北에 중유 5만t 제공(11/13)

- 북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12일 북한에 제공할 중유 5만t을 선적하고 있다면서 중유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북한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국무부 로버트 우드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미국 정부는 행동 대(對) 행동 원칙에 따라 미국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작년 2월 체결된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대가로 미국을 비롯해 나머지 5개국이 북한에 100만t의 중유를 제공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음.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내역 검증방법 및 검증대상 등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계속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중유제공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지 주목됨.





- **北신문, 美 핵우산론에 “군사력 강화조치 취할 것”(11/12)**
  - 북한 노동신문은 12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데 맞서 “군사력 강화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핵우산 제공론은 핵선제공격론’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대한, 대일 핵우산 공약은 “본질에 있어서 저들의 침략적 대조선 전략에 따라 우리나라를 핵선제공격하겠다는 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 신문은 이어 “우리나라에 대한 미 호전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책동이 강화될수록 우리의 자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 신문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은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고, 미국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해당한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이고 당연한 대응 방식”이라며 “대결에는 대결로, 대화에는 대화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내년 美유명미술관서 北미술 전시회 개최”<RFA>(11/11)**
  - 북한의 현대 미술작품 전시회가 내년 하반기 미국의 뉴욕 또는 워싱턴에서 유명 미술관 주관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1일 보도.
  - 네덜란드인 사업가이자 북한 미술 수집가인 프란치스쿠 브뢰르센씨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뉴욕의 유명 미술관 두 곳과 워싱턴의 국립 미술관이 북한 현대 미술품을 전시하는 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미술관 관계자들이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현대 미술품들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북한의 작품들이 미국 관객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에서 전시될 북한의 현대 미술품은 김성희, 정창모, 문화춘 등 북한의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들이 그린 산수화와 민속화이며, 정치색 작품은 배제됐다.
  
- **北, 내달 아.태 비정부안보대화 참가<RFA>(11/11)**
  - 북한이 내달초 태국의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CSCAP) 대량살상무기(WMD) 분과위원회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 이번 분과위원회의 사회를 맡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랄프 코사 총재의 말을 인용해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과 함께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방송은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WMD의 확산 방지지만 회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국과 북한간 관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SCAP는 지난 1994년 설립된 민간차원의 국제지역 안보 협의기구로, 비정부 차원(Track II)의 안보대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





- “北 리근 파견은 보다높은 차원 협상 용의” <北대변 조선신보>(11/10)
  - 북한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된 시점에 뉴욕을 방문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의 사태 진전을 토대로 “미국측과 보다 높은 차원에서” 현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0일 주장했다.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조미 현안 해결, 오바마 새 정권의 과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이 큰 정치로 변혁의 흐름을 주도한 실적”이 있다고 상기시키며, 오바마 당선인측에 대해 “관례화된 악습(대북 압력)을 답습하여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정권 출범 초기부터 독자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필요”를 제기했음.
  - 신문은 그러나 오바마 당선인이 적대국 지도자와 대화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 “조선(북한)의 ‘선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라면 과거의 오만한 미국식 외교와 다를 바 없다”며 대북 외교 변혁의 우선순위에 ‘적대시 정책’의 전환을 둘 것을 주장하고 “미국이 변하면 조선도 호응할 것이며, 새로운 조미관계의 구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다. 중·북 관계

- “北, 中 관광객 방문 제한” <中 여행업계>(11/13)
  - 북한이 최근 동맹국인 중국 관광객들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고 중국 여행사 관계자들이 13일 밝혔음. 중국의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북한이 신의주 앞 중국 영토인 단둥(丹東)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주요 교통로 중 하나를 사실상 봉쇄하는 등 중국 관광객들의 방문을 막고 있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그동안 비릇 소수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관광객들을 보내온 중국 여행사들은 관광객 모집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철도보다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실정.
  - 단둥의 한 관광 안내인은 “국경은 지난 10월 이후 봉쇄됐다”며 “북한 방문을 희망한다면 선양(瀋陽)으로 가서 항공편을 이용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 철도 관리는 화물차의 경우 현재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행 열차는 대부분 화물열차로 한 주에 4차례 운행하며, 한 열차가 막 떠났지만 승객이 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中언론, 北 강경태도 변화 ‘예의주시’(11/13)
  - 중국 언론들은 북한이 남북 채널 단절을 선언하고 북핵 검증과정에서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등의 강경 입장으로 변화한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크게 주목했음. 중국 언론들은 북한의 발표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을 사실 위주로 보도하면서도 북측의 태도 변화가 향후 남북관계와 북중 관계 등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과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음.

- 관영 신화통신은 12일 평양발 기사를 통해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북측 대표를 철수시키며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남북 직통전화 통로를 단절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통신은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대해 북한 측이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북한군이 이날 남측 군당국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내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 신화통신은 또 한국 정부가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남북 간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차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기사를 별도로 게재했음.

#### ● “中, 北 혼란 대비해 국경에 병력 증강” <FT>(11/13)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가면서 중국은 지난 9월 이후 북한과 접경지역에 군병력을 증강하는 한편 울타리 설치도 늘리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 FT는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의 정정불안이나 정권의 붕괴로 인한 난민의 유입에 대비해 국경선을 따라 병력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 미국 관리는 중국의 병력 증강이 ‘극적’(dramatic)이지는 않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국경 주요 지역들에 울타리를 더 많이 쌓아가고 있다고 밝혔음.
- 중국의 병력 증강은 또한 북한의 핵프로그램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미 당국이 김정일 위원장이 아직 스스로를 통제할 만한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현 건강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 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 ● 北 리근, 中에 北美회동 결과 설명(11/12)

- 북한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북·미간 회동 결과를 중국측에 설명하고 북핵 6자회담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 뉴욕 방문을 마친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은 11일 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뒤 12일 중국 외교부를 방문, 중국 측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리 국장은 방미 기간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성 김 북핵 특사 등과 만나 핵 검증 이행 방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인축 인사와도 처음으로 접촉했음.
- 리 국장은 11일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미



기간에 좋은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미국 방문이 성공적이었느냐는 질문에 “잘 진행됐다”고 답했음.

● **北, 中접경 도시 현대화 추진(11/10)**

- 북한이 중국의 지안(集安)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접경도시인 자강도 만포시를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로 재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10일 “조국의 북변 압록강반에 자리잡은 만포시의 면모가 최근 몇해 사이에 몰라보게 변했다”며 “시 안의 많은 도로와 공공건물, 살림집(주택)이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 보수돼서 선군시대의 국경도시다운 면모를 갖추었다”고 소개했음.
- 만포시내 도로를 포장하고 공공건물들도 리모델링했을 뿐 아니라 주택들은 창유리와形形色색의 외장재를 활용해 거리 분위기를 밝게 바꿨다는 것.
- 중앙방송은 “저녁에는 창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과 특색있는 가로등 빛으로 하여 독특한 정서를 자아내는 야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새로 개건된 만포시인민병원과 만포유치원은 도시를 찾는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시의 자랑으로 되고있다”고 전했다.

라. 일·북 관계

● **“北, 日에 추가 납치피해자 존재 시사”<교도통신>(11/13)**

- 북한이 지난 6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실시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일본측에 대해 추가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3일 보도.
- 통신에 따르면 일본과의 물밑 협상 과정에서 북한측은 양측간 협상 진전을 조건으로 일본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는 17명 이외의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정보 및 17명의 안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북한의 이런 의사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일본에 송환됐고 나머지 8명은 숨진 만큼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 교도통신은 이에 따라 북한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요코타 메구미씨 정보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

● **납북 주장 日여성 오빠 “북한에 살아있다고 확신”(11/10)**

-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일본인 여성 마쓰모토 교코(松本京子)가 살아 있다고 그녀의 오빠가 10일 밝혔음. 의류공장에 다니던 교코는 1977년 일본 돗토리(鳥取)현 요나고



(米子)시에서 뜨개질 교실에 간다며 외출한 뒤 소식이 끊겼음. 그녀는 실종 당시 29살이었으며 살아있다면 올해 60살이 됨.

- 일본 정부는 교코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다고 하며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으나 북한은 그녀가 북한에 입국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교코의 오빠인 마쓰모토 하지메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동생이 살아있는게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동생을 구할 수 있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저 동생이 건강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의 한 고위관리가 중국인 남자를 연락책으로 내세워 교코와 그녀의 가족의 만남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음.

#### ● 北신문 “日 제재강화에 초강경 대응할 것”(11/10)

-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일본의 압력과 제재강화조치에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당 기관지인 이 신문은 ‘정치 난장이들의 부질없는 소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압력강화나 추가제재로 우리 공화국(북한)을 어찌보겠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며 “우리나라는 지금껏 일본의 제재를 받으며 살아왔고 끈질긴 제재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자립적 민족경제토대를 튼튼히 쌓아왔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일본은 마치 저들의 지원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참으로 가소롭고 어리석기 짝이 없다”며 “우리에게는 자기 식의 생활방식이 있고 살아갈 방도가 있으며 압력이나 제재 따위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극조차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 마. 기타

##### ● 北, 이란주재 대사에 서세평 임명(11/16)

- 북한이 김창룡 이란주재 대사의 후임으로 서세평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16일 보도. 북한 방송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이란이슬람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로 서세평이 임명됐다”고 전했다.
- 서 신임대사는 카라치 주재 북한총영사관 영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약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전임 김 대사는 2004년 3월 부임했음.
- 북한과 이란은 1973년 4월 수교했으며 모하마드 아크바리 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이란 청년단체 대표단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방북하는 등 최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



### ● 이란 “남북관계 중재 용의..통일 위해 힘쓸 것”(11/16)

- 최근 남북한을 방문한 마누체르 모타키 이란 외무장관이 급속히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란이 중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고 이란 관영통신 IRNA가 16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모타키 외무장관은 한국 외교부 관계자에게 “국제사회에서 오랜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이란의 경험을 살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이 대화를 재개하고 나아가 통일로 갈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모타키 장관은 또 “남북한 관계개선은 이란 외무부가 매우 중요시 여기는 당면과제 중의 하나이며 이란은 남북한과 더 많은 분야에서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모타키 장관은 지난 12일 북한을 방문해 “이란은 원칙적으로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해 단일국가 가 되는 것을 적극 지지하지만 남북간의 문제는 외세의 간섭없이 양국이 스스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 “김일성, 비핵화 지지” 외교문서 첫 공개(11/16)

- 1960년대 북한 김일성 주석이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직접 언급한 공식 외교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일성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했다는 것은 각종 루트를 통해 전해졌지만 이같은 입장이 김 주석이 직접 써서 중국에 보낸 답신 형태의 외교문서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
- 16일 연합뉴스가 중국 외교부 문서관리소를 통해 입수한 ‘김일성 주석이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에게 보낸 답신’이란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김 주석은 북한은 핵무기의 전면적 금지와 핵무기 폐기를 지금 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
- 김 주석은 1964년 10월 30일께 보낸 서신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핵무기를 철저히 폐기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면서 “조선 인민은 핵무기의 전면 금지와 철저한 폐기를 실현하고자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인민과 일치단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주석은 이 서신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핵위협 정책과 핵전쟁 도발 음모에 반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하겠다는 단서를 붙였음.
- 실제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의사가 없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우리의 이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고 이에 앞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도 2005년 “김 위원장이 비핵화는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음.
- 김 주석은 저우 총리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제1차 핵실험을 성공한 것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선 방어적 조치로서 명백히 옳은 것”이라면서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주석은 또 1965년 5월 17일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장과 공동명의로 보낸 별도의 서한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에게 제2차 핵실험의 성공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 “대북진출 오라스콤, 노키아와 협력 계약” <RFA> (11/14)

- 대북 사업을 벌이는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 텔레콤이 지난달 27일 세계적인 통신회사인 핀란드의 노키아와 협력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오라스콤 텔레콤이 준비하고 있는 북한의 휴대전화 사업에 노키아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노키아는 앞으로 오라스콤에 음악과 동영상, 네비게이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오라스콤측은 “노키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오라스콤사가 진출한 나라의 모든 오라스콤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 노키아측은 오라스콤을 통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공식 발표는 없다”면서도 노키아가 오라스콤에 각종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노키아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당연히 노키아가 제공하는 음악이나 동영상이 북한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北, 내달 10일부터 외국인관광객 항공편 입국금지”(11/13)

- 북한 당국이 지난해보다 시기를 다소 앞당겨 내달 10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도 금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선양(瀋陽)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지난 10월 중순 기차를 이용한 외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을 금지하고 나서 선양을 통해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만 받아들였지만 내달 10일부터 비행기를 이용한 단체관광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비즈니스 목적의 북한 방문과 화물 운송은 육로, 철도, 항공편 등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 이 관계자는 “시기에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연말 ‘내부총화’를 앞두고 평양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내보내고 동시에 입국을 금지했다가 이듬해 초에 다시 방북을 허용하던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관행으로 이번 조치에 특별한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北핵실험 탐지 지진계 3군데 설치된다(11/13)

- 기상청은 이달 말께 북한의 핵실험과 땅굴 발파 작업을 탐지할 수 있는 지진계를 휴전선 근처인 강화와 연천, 인제 등 3곳에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 기상청에 따르면 각각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00m에 설치되는 이들 지진계는 북한에서 핵실험이나 땅굴 발파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을 높은 감도로 잡아낼 수 있음. 기상청은 앞으로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이 감지되면 즉각 언론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지진 발생지역과 진도, 인공지진인지 아니면 자연지진인지 등이 명시된 통보문을 발표하게 됨.
- 기상청 관계자는 “핵실험이나 땅굴 발파작업에 따른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은 에너지 방출 시간과 지진파의 특성으로 구별이 가능하다”며 “자연지진은 에너지 방출시간이 긴 반면 인공지진은 그 반대”라고 설명했다.

### ● 北-이란 외교장관 회담..친선 과시(11/12)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12일 북한을 방문한 마누체르 모타키 이란 외교장관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친선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들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가졌으며 양국 간 “친선 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통신은 전했다.
- 회담에는 북한 측 관계기관 간부들이, 이란 측에서는 모타키 외교장관 일행과 머르테자 머로디온 북한주재 이란대사가 각각 참석했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모타키 외교장관 일행을 각각 만나 대화를 나눴으며, 모타키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주는 선물을 김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음.
- 김 상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며 “이란과의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 그린닥터스 “당장 개성병원 진료중단 없다”(11/12)

- 북한 개성공단에서 개성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린닥터스는 “북한 군이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개성병원의 진료가 당장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 그린닥터스 측은 “개성공단에 있는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의 운영과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진료중단 통보를 받은 바 없다”라며 “11일 대표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내년도 남북협력진료에 대해 협의했는데 개성공단 철수 얘기는 전혀 없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 국제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는 2005년 1월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남북한 근로자들의 진료를 위해 응급진료소를 설치,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4월 병원 수준의 개성병원으로 발전시켜 2008년 11월 현재 10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을 진료했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빅터차 “韓美 관계 FTA.북핵 공조가 변수”(11/15)

-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14일(현지 시각)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과 북핵 문제 등이 향후 한미 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차 교수는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한미 FTA 협정 기준이 양국 관계 발전과 신뢰 구축에 더 없이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했다”며 “FTA는 양국 모두에 혜택을 줄 것이며 미국은 한국에만 국한하지 말고 대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한미 FTA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한국과 미 차기 행정부의 미래 관계’를 주제로 강연한 차 교수는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와 한국간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 FTA와 북핵 문제,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 북한 김정일 체제의 급변 가능성 등 4가지를 꼽았음.
- 차 교수는 북핵 문제와 관련,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부시 정부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북 정책을 펼 가능성은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조만간 기존 약속 이상의 요구를 해 올 것으로 보이며 보다 유연한 대북 정책이 북한 관계에서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음. 차 교수는 “북한에 대해 일정한 선을 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레드라인(RE D LINE)을 긋는다면 북한은 당장 그 선을 넘어버릴 것이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 李대통령, ‘오바마 대리인’과 회동(11/15)

-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당선인측 대표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공화당 인사인 짐 리치 전 하원 아태소위원장과 회동했음.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30분 정도에 걸쳐 국제 금융위기 극복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오바마 당선인측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는 않았음. 오바마 당선인은 G20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대신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리치 전 위원장을 대표로 파견했음.
-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 정책을 소상히 설명한 뒤 북핵 사태 해결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경우 오바마 당선인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미간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한미 양국이 굳건한 동맹관계를 통해 확실한 대북 공조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 대변인은 “이날 회동은 오바마 당선인 측에서 요청해서 이뤄졌으나 오바마 당선인측 요청과 관례에 따라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사전에 약속했다”면서 “당초에는 오바마 당선인측이 회동 자체를 비공개로 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 나. 한·일 관계

##### ● “韓日, 북핵 시료채취 명기위해 연대 강화”(11/13)

- 한국과 일본 정부는 13일 오후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외교·방위 분야 국장급이 참석한 안전보장대화를 열고 차기 6자회담에서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핵신고 검증 틀과 관련, 합의 문서에 핵시료 채취를 명기하도록 하는데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
- 이날 회담에서 일본측은 북한이 12일 성명에서 검증과 관련해 시료 채취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문서화는 필요하다”고 했고 한국측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끈기있게 합의를 요구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 양국은 또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연대가 중요한 만큼 내년 1월 발족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권과도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 나가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음.
- 양국간 안전보장대화는 이번이 8번. 대화에는 한국측에서는 조태영(趙泰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등이, 일본측에서는 사이키 아키카다(齋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각각 참석했음.

#### 다. 미·일 관계

##### ● “美日, 한반도 유사시 작전 전면 재검토”(11/11)

-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반도, 일본 등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군과 자위대의 대처 방법 등을 담은 ‘공동작전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보도. 신문은 북수의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양국이 유사시 미군이 사용하는 민간공항 선정이나 부상 미군병사 이송 및 치료 체계 정비 등 10여개 항목이 주요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 양국 정부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에 따라 한반도 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공동작전계획 재검토를 가속화해 내년 가을까지는 완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계획 전면 재검토는 2006~2007년에 이어 두번째. 양국 정부는 이런 계획의 존재 자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음.
- 이번 주요 검토 내용은 긴급사태 발생시 미군이 사용할 민간 공항과 항만 선정, 비행제한 등을 포함한 공역 관리, 부상 미군병사 이송 및 수용을 위한 의료지원 시스템, 미국이 포로로 잡은 사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허용 등을 담고 있음.





- 또 미군 및 자위대에 의한 전파 우선 이용, 화학·생물·핵무기 공격에 대한 대응, 미·일간의 정보 공유 강화, 미군 방호우선시설 정밀 조사, 상호 후방 보급 지원,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수색 등의 내용도 주요 검토 항목에 포함돼 있음.

#### 라. 미·러 관계

##### ● 美-러, 내일 제네바서 START 후속협상(11/12)

- 미국과 러시아가 13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략핵무기 탄두를 추가로 제한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 이번 협상에서는 또 1991년 양국 간에 체결된 전략핵무기감축협상(START)이 내년 말로 만료되는 만큼, START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도 다뤄질 것이라고 AP 통신이 전했다.
- 앞서 존 루드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 직무대행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활발한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측과 협상일정을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당시 루드 차관 직무대행은 또한 미국이 이미 2~3주전에 러시아측에 START 후속협상을 벌일 것을 제안했고, 이와 별도로 미국이 유럽에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쌓도록 하기 위해 별도 협상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 마. 기타

##### ● 李대통령, G20.APEC 참석위해 출국(11/14)

- 이명박 대통령은 G20 금융정상회의와 제16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11박 13일 일정으로 14일 오전 출국.
- 이 대통령은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회의, 브라질 공식 방문, 페루 국민방문에 이어 22일부터 23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에 참석할 예정.
- G20 금융정상회의의 안건은 국제금융위기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세계 금융시장 감시 강화 등이며, 우리나라 외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20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정상이 참석하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총재와 유엔 사무총장, 금융안정화포럼(FSF) 의장 등도 자리를 함께 함.
-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방안과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금융체제 강화, 신흥경제국이 포함되는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 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과의 간담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회동, CNN 회견, 미 업계 대표들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등도 전개함.
- 이 대통령은 17일부터 20일까지 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공식 방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과 양국간 자원·인프라·농업 분야 협력 강화, 금융위기 공동대처 방안 등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페루로 이동,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간 에너지자원 협력, 투자 증진,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곧바로 같은 곳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CEO 서밋에서 첫 연설자로 나서 '아시아 경제부상의 시사점'을 주제로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극복 경험과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 등을 담은 연설을 할 예정.

- 이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정책 소개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부활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을 갖는 등 다자 외교 활동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대통령은 APEC 회의 뒤 귀로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찾아 재미 동포들을 격려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면담, LA 시장 오찬을 가진 뒤 26일 오전 귀국.

#### ● 한-호주 정상, 금융위기 공조방안 논의(11/13)

-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13일 전화통화를 갖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음. 양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13분 동안 계속된 전화통화에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중요한 만큼 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의에서도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양 정상은 특히 다자간 협력체제 중심의 G20 회의가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고 이를 위해 역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음. 아울러 이번 금융위기를 틈탄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 회귀를 막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음.

[참고 1] <표> **李대통령 G20,APEC 참석 주요 일정(11/10)**

일시	장소	주요일정
11.14(금)	워싱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접견 -브루킹스연구소 간담회 -G20 금융정상회의 백악관 공식만찬
11.15(토)	워싱턴	-금융정상회의 1.2세션 참석
11.16(일)	워싱턴	-미 상공회의소 회장 접견 -CNN 회견
11.17(월)	브라질 상파울루	-한·브라질 경제인 오찬간담회 -브라질 동포 리셉션 -상파울루 주지사 내외 주최 만찬
11.18(화)	브라질 상파울루	-경제사절단 오찬
11.19(수)	브라질리아	-한·브라질 정상회담 -한·브라질 정상 공식오찬 -브라질 상원의장 면담 -브라질 하원의장 면담
11.20(목)	페루 리마	-페루 동포 리셉션
11.21(금)	페루 리마	-독립기념비 헌화 -공식환영식 -한·페루 정상회담 -국민오찬 -페루 국회의장 면담
11.22(토)	페루 리마	-아태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기조연설 -제1차 APEC 정상회의 -APEC ABAC(기업인자문회의) 대화 -APEC 정상 공식만찬
11.23(일)	페루 리마	-제2차 APEC 정상회의 -APEC 정상오찬
11.24(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지사 접견 -동포리셉션 -LA 시장 주최 오찬
11.26(수)		-귀국

※ 현지시간 기준(귀국은 한국시간)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11/10/0503000000AKR20081110144600001.HTML>